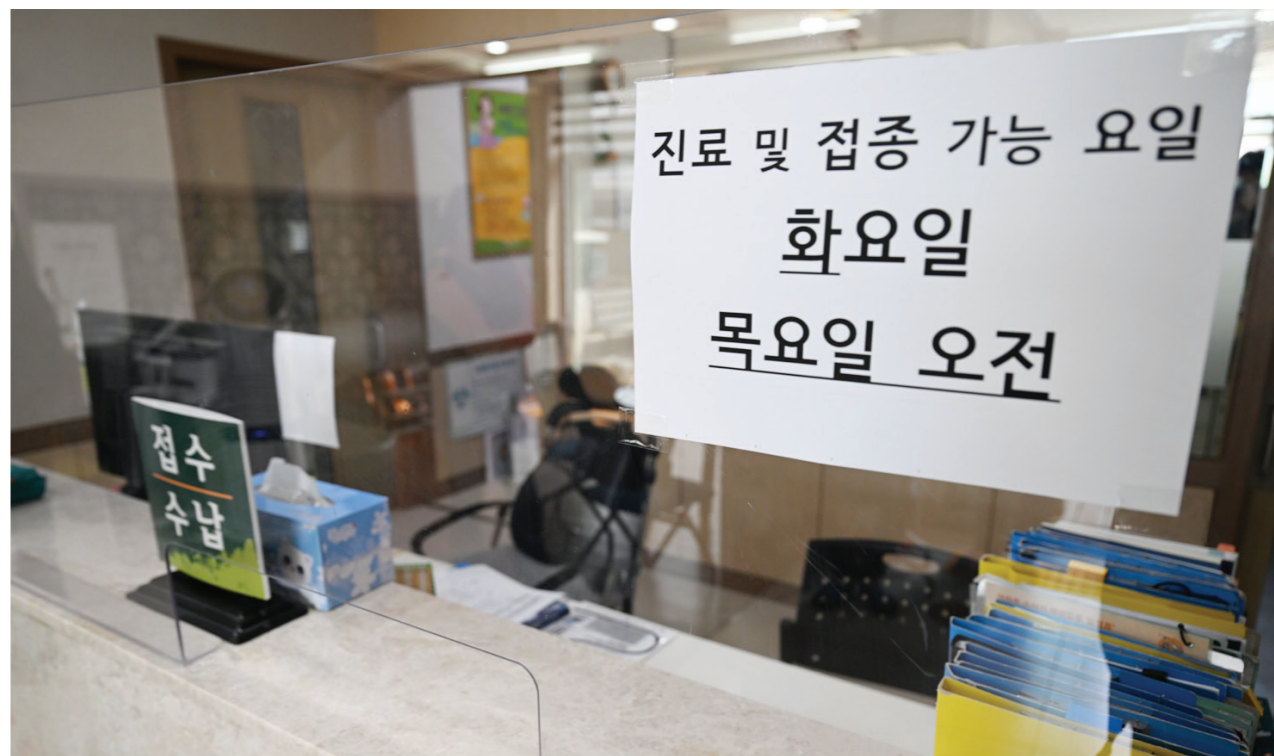


## “내일 다시 오라고?”...공보의 추가차출에 전남주민들 불편

### 담양 관내 공중보건의 절반 차출 의사 없어 순회근무 보건소 늘어 전남 25일에도 22명 추가로 파견 농어촌 의료시스템 붕괴 우려 커

“예방접종하러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없다고 하네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공공보건의(공보의) 추가 차출이 이뤄진 지 2일째인 27일 오전 전남 담양군 한 마을 보건지소. 이 마을 보건지소 출입문에는 ‘내과 선생님의 파견근무로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에만 진료 가능’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안내문을 보지 못했는지 보건지소를 방문했던 주민 양모(74)씨는 “헛걸음을 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위해 보건지소를 찾아왔던 양씨는 “의사 선생님이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차출돼 오늘은 예방접종 주사를 맞지 못한다고 한다”며 “음내까지 나갈 수 없고 내일 다시 와야겠다”고 말했다. 해당 보건지소 접수대에도 예방접종과 진료를 매주 화, 목요일에만 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었다. 공보의가 없는 진료실은 불이 꺼진 채 빈 책상 위 청진기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약 10km 떨어진 인근 또 다른 보건지소 역시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 진료 접수대에는 내과 진료는 일주일에 두 번만 가능하다고 문구가 붙어 있었다. 불이 꺼져 있는 진료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보건지소 앞에서 만난 마을주민 박모(80)씨는 “혈압약이나 관절약은 미리 받아 놓으면 되는데 갑자기 갑자기 걸리면 어쩌나”며 “급하게 병원을 가야 할 때 차도 없는 노인들은 여간 막막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농번기가 시작돼 가뜰이나 바쁜 시기에 읍내 병원까지 오가야 할 처지”라며 “이러니 누가 시골에서 살겠나. 하루빨리 이번 사태가 끝나길 바란다”고 하소연했다. 담양 관내 보건지소는 지난 11일에 이어 25일 공보의 추가 차출이 이뤄지면서 배치된 전체 공보의 10명 중 절반인 5명이 자리를 비우게 됐다. 담양에서는 공보의 감소 추세로 기존 대서와 대덕, 수북 보건지소 등 3개소가 순회진료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번 공보의 차출로 무정과 대전, 월산, 장평 등 4개 보건지소와 보건소까지 순회진료를 하는 곳이 더 늘었다. 이처럼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공공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에서 전남지역 공중보건의가 대거 차출되면서 농어촌 의료시스템 붕괴가 우려된다. 전남도는 보건복지부 방지에 따라 지난 11일 23명의 공중보건의를 파견한 데 이어 25일 22명을 추가 파견했다. 앞서 지난 4일에 공중보건의 1명이 긴급응급의료상황실에 배치됐다.



27일 오전 전남 담양군 한 마을 보건지소 접수대에 공중보건의 차출로 진료 일정 변동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다.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공공의료 공백이 심각한 가운데 전남지역 공중보건의 45명이 차출돼 농어촌 의료시스템 붕괴가 우려된다.

2주일새 44명, 한 달도 안돼 45명의 공중보건의가 지역을 떠나 수도권, 대도시 등지로 차출된 것이다. 1·2차 파견 인원은 전남지역 전체 공중보건의 267명의 16.8%에 이르는 것으로, 차출 인원만 놓고 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양=박종영기자

## ‘비례 돌풍’ 조국혁신당 호남 지지 어디까지


### 정권심판론·민 공천과동 영향 범야권 지지층·중도까지 가세

호남에서 부는 조국혁신당 돌풍이 거세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일었던 안풍(安風)과는 또 다른 성격이다. 검찰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뚜렷한 지향점 아래 범야권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까지 끌어모으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심판 여론과 민주당 공천과동이 불러온 신드롬이다. 여기에 대한민국 정치 지형과 국민 정서 등 보다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하면서 조국혁신당 돌풍이 총선과 그 이후까지 큰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반면 총선 막판에 민주당 표 결집이나 도덕성·공정성 리스크, 20대 청년층의 낮은 지지율 등이 조국혁신당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27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의 높은 지지율을 견인하는 돌풍의 진원지는 ▲호남 ▲진보 성향 ▲50대로

분류된다. 특히 호남지역 지지율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 30%대를 넘어 40%를 육박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 3.1%p·응답률 14.3%)에서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을 묻은 결과 호남의 지지율이 32%를 기록했다.(자세한 조사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조국혁신당이 당초 목표로 했던 비례대표 10석을 상향조정해 14~15석까지 내다본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콘크리트 지지율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다. 돌풍의 배경에는 무엇보다 윤석열 정권 심판과 검찰개혁이라는 선명한 목표를 제시한 것이 주요했다. 이를 통해 범야권 표 뿐만 아니라 중도층까지 끌어 모으는 윙크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종섭 대사·황상무 수석 사태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인 선거 전면으로 부상한 게 최정점이었다.

이른바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라는 구호가 먹히고 역대 선거에서 전략적 선택을 해왔던 호남지역민들의 교차투표 성향도 두드러지고 있다. 그 흐름의 중심에는 정권심판론이 자리한다. 또 민주당이 총선 초반 심각한 공천과동을 겪으면서 이탈했던 호남의 지지층이 조국혁신당으로 몰리는 경향도 뚜렷하다. 광주·전남지역 현역 물갈이론에 편승해 진명 위주로, 과도하고 무원칙한 경선이 이뤄진 게 결정적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폭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제1당 민주당에 대해 반감도 있던 터였다. 그렇게 이탈했던 민주당 지지층이 제3세대 새로운미래나 개혁신당으로 가지않고 무당층 형태로 머물러 있다가 새로운 대안, 조국혁신당을 찾는 모양새다. 호남지역민들 사이에는 조국 대표에 대한 동정론도 상당하다. 소위 ‘조국사태’로 우리 사회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은 있지만, 그동안의 검찰수사나 사법처리를 통해 충분히 감수했다는 시각이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거세지면서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물뿔론’을 들고 나온 것도 조국혁신당과

비례의석 경쟁을 해야 하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호재이자, 약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조국혁신당을 찍겠다는 유권자들이 많아져 투표율이 높아지게 되면 지역구 투표에서 민주당에게는 호재다. 최근 여론 추이대로 진보진영뿐만 아니라 중도층까지 흡수할 경우 범야권의 표결집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에 비례대표 의석 측면에서 보면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여론조사 데이터 분석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 보다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로 빠져 나가는 경향이 35%대로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조국 대표를 비롯해 조국혁신당 소속 후보들의 사법리스크나 공정성 논란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20대 청년층의 약한 지지세도 난제다.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넘어 확실한 원내 제3당으로 국회에 진입할 수 있을지, 총선 이후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 진영 다툼의 한 축으로 작동할 있을지 주목된다. 이슬비기자



**수많은 땀방울이 모여 지켜지는 소중한 권리**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① 사전투표

**4월 5일(금) ~ 6일(토)**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② 선거일 투표

**4월 10일(수)**

오전 6시~오후 6시



후보자 정보 확인  
info.nec.go.kr



정책·공약 확인  
policy.nec.go.kr



후보자 토론회 다시보기  
debates.go.kr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ne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